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용역 결국 파행

나주시 "산업연구원이 회의록 거짓 작성해 용역 핵심 방향 변경" 회의 불참한 나주시 팀장 '참석·동의했다'고 회의록에 거짓 명시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용역이 실무자 협의회 '회의록 조작'이라는 진실 규명 문제를 남긴 채 결국 파행으로 종결됐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3개 지자체가 1억2200만원씩 균등하게 부담해 총 3억6600만원을 들여 2020년 7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완료됐지만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23일 용역계약 추진을 위해 3개 지자체와 산업연구원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통해 '사업(용역) 계획 변경과 수정 등 중요 사항은 위탁자(3개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용역은 그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 간 이견을 좁히고 '기금의 규모', '사용범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수립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용역 과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얼마를 기금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금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었다.

그간 나주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출연할 경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혁신도시 특별법 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 공유)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해 앞서 지난 2006년 2월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3개 지자체장은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지자체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를 넘어선 기금 출연을 주장하자 이견과 갈등이 지속돼왔다.

결국 3개 지자체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연구원에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산업연구원의 회의록 조작 건이 단초가 돼 발전기금 조성을 발목 잡고 있다.

용역의 한 당사자인 나주시는 '혁신도시 특별법'과 '2006년 3개 지자체 협약'에 근거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발전기금 규모를 산출한다'는 전제로 용역에 참여했지만

결과를 용역 기관이 위탁자를 기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위탁자인 나주시에 지난 7월 제공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와 발전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계획서' 과제 개요 '연구 목적' 조항을 확인한 결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세수의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광주·전남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업연구원 담당 연구원 A씨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중요 과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인 나주시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용역을 추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A연구원은 지난해 10월6일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광주시 출장사무소에서 용역 위탁기관 업무 담당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전남도 담당자는 참석했지만 나주시 담당자인 B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B팀장은 급한 공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나주시청 근무 부서에서 행정전산방

에 접속해 업무를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A연구원은 '공동혁신 3개 지자체 실무자 협의 결과'를 기록한 증빙자료에 '나주시 B팀장이 실무 협의회에 참석했고, 발전기금 재원 출연 범위 용역 업무를 나주시의 지방세 수입 외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모든 세수를 세입대상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가운데 나주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회의록 문건은 나주시가 지난해 7월27일 광주시, 전남도 등 3개 지자체 국장급 이하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용역 추진 협의를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산업연구원을 방문한 날 B연구원이 용역안 변경의 '증빙자료'로 제공해 입수하게 됐다.

나주시는 이후 위수탁 용역협약서를 벗어난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에 착수한 결과 회의록이 조작됐음을 인지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용역의 방향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공문서로 변경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위탁자에게 동의할 경우 '변경협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용역 방향 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 도서지역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보성경찰서(서장 오

임관)는 9. 28일 사 회안전망 취약지역인 보성군의 대표 도서지역인 벌교읍 강도를 찾아 어르신 범죄예방 홍보 등 노인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순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지킴이 역할'특목'

순천경찰서(최병

윤 서장)는 지난 9월 30일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기여한 순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순천=김승훈기자



광주 남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시민 설치단 간담회

광주 남부 소방서(서장 이정자)

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민 설치단의 활동이 중요됨에 따라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운영했다.

완도=이민혁기자



담양소방,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군 소재

대전시장, 창평시장과 곡성군 소재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옥곡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점포점검의날'을 운영 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리 가득 메운 시민들

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

숙박업소서 투숙객 경찰관에 흥기 난동

소음 갈등을 빚던 숙박업소 내 옆방 투숙객과 출동한 경찰관에 잇따라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옆방 투숙객을 흥기로 짜르고 출동 경찰관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투숙객 신체 일부를 흥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흥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